



3면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

전주매일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음 1월 28일) 제34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본격

전북자치도-새만금청
대통령 소속 농어업위와
식품산업 발전 힘 모아
기관별 협력내용 설정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



7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서 열린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물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물 관련 기업의 원활

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하며, 새만금개발청은 농수산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수요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이 △생산자·수출기업의 동반성장과 △농수산물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글로벌 식품 허브는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물 산업의 꿈

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가 우리나라 농어업 관련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계획이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이 '한국형 대규모 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동북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 기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른 1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해,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역할을 토대로 체결한 이번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관문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소속 여성공무원 비율 39.9%

5급 이상 관리자 비율 32.4%... 행안부 목표 상회

'일·가정 양립' 가장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노력 주효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직급인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공직 양성평등과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청 소속 여성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말 기준 36.3%, 2021년 38.2%, 2022년 39.0%, 2023년 39.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 통계를 보면 총인원 대비 2020년 22.6%인 99

명, 2021년 27.1%인 122명, 2022년 29.7%인 137명, 2023년 32%인 154명으로 최근 4년사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4차 관리자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에서 정한 목표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현재도 행안부 목표보다 상회한 32.4%를 여성관리자로 임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여성공무원과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승진 내정 인사에서도 4급 과장급 13명 중 여성 6명이 승진자로 밝혀 임명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쿠광, 완주에 등지 튼다

봉동 둔산리에 배송센터 구축

국내 유통물류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쿠광이 완주군에 물류인프라를 세운다.

완주군은 쿠광이 봉동을 둔산리 924-15 일원 5,000여평 규모의 배송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현장에는 전기화물차의 이동 동선, 충전 효율화 등 유통물류 환경 최적화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쿠광 관계자는 "완주군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이 힘입어 주요 배송센터 가운데 하나를 완주에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해 고속도로 3곳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북 지역을 아우르는 로켓배송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22년 로켓택배를 인수한 상장업체 코웨이선(주)과 14만5,800㎡ 부지에 2,200억 원을 투자

하는 협약을 체결, 8,600여개 영업소를 보유한 로켓택배 분사 유치에 성공했다.

이어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BYC, 세방까지 국내 유수 물류업체를 잇따라 유치하며, 테크노제2산단 물류용지 10만여 평을 완판시켰다.

업체들은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기업친화 정책, 주거 여건 등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돼 있는 완주군을 최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쿠광 배송센터 유치까지 포함해 완주군의 물류유치는 더욱 공고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물류는 제3의 이윤과 비유철강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며 "쿠광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완주군에 물류인프라를 갖추게 됨을 환영하며, 군에서도 쿠광, 로켓택배 등 물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권익 구제'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 청소년 주류판매 심리기준 완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감경 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3월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적발 2개월)

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

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지만,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는 영업정지 7일,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감경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의의회
Wanju County Council